


 금융위원회	보 도 자 료				
 법무부					
 금융감독원					
보도	2020.11.16.(월) 10:00부터	배포	2020.11.16.(월)		

책 임 자	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장 이 수 영(02-2100-2510)	담 당 자	김 세 화 사무관 (02-2100-2511)
	법무부 상사법무과장 임 철 현(02-2110-3167)		박 성 원 계 장 (02-2110-3863)
	금융감독원 저축은행감독국장 서 정 호(02-3145-6770)		박 종 춘 팀 장 (02-3145-6772)

제 목 : 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하겠습니다.

- 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'20.11.16.(월) 07:30 당정협의를 개최하고,
「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」을 논의·확정하였습니다.

<당정협의 개요>

- 일시/장소 : '20.11.16(월) 07:30~08:30, 의원회관 306호
- 참석자
 - (黨) **김태년** 원내대표, **한정애** 정책위의장, **윤호중** 법사위원장,
윤관석 정무위원장, **유동수** 정책위 수석부의장, **김영진** 원내수석부대표,
백혜련 법사위 간사, **김병욱** 정무위 간사, **한병도** 정책위 제1정조위원장,
조승래 원내선임부대표, **오영훈** 당대표비서실장, **정태호** 전략기획위원장,
홍정민 원내대변인 등
 - (政) **은성수** 금융위원장, **고기영** 법무부 차관 등

※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[별첨] :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

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	본 자료를 인용 보도 할 경우 출처를 표기 해 주십시오. http://www.fsc.go.kr	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@korea.kr	 질병관리본부 콜센터	
---	--	--	---	---

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

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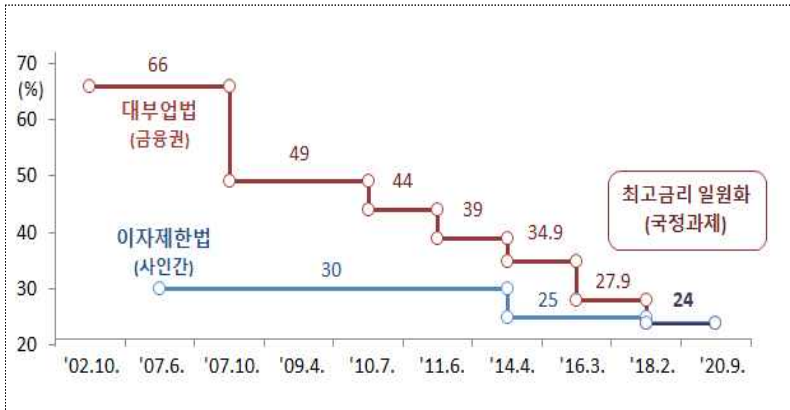
2020. 11. 16.

금융위원회 · 법무부

1 법정 최고금리 연혁 및 현황

- **법정 최고금리는 대부업법(금융회사) · 이자제한법(사인간 거래)에서 규율하고 있으며, 지속적인 인하를 거쳐 '18년부터 24% 적용**
 ⇒ **최근 저금리 기조 · 시민부담 경감 차원에서 인하논의 진행중**

【 최고금리 인하 추이 】



【 인하논의 현황 】

인하(안)	제안의원
22.3%	송갑석 ^{더민}
20%	김철민 ^{더민}
	박홍근 ^{더민}
	추경호 ^{국힘}
12% (재난시 대부법)	김영호 ^{더민}
10%	문진석 ^{더민}
	김남국 ^{더민}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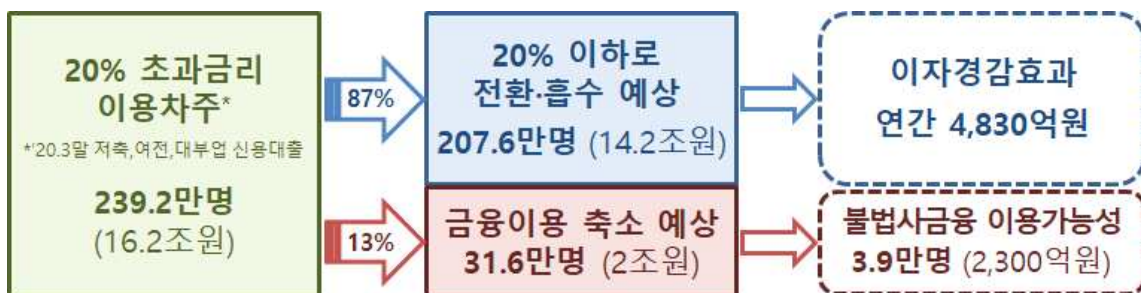
※ 국정과제('17.7월 발표): 20%까지 단계적 인하

2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

※ 사인간 거래(이자제한법)의 경우, 이용자·규모 등에 대한 추정이 곤란하여 이하 분석에서 제외

- **이자경감 효과와 금융이용축소 우려를 종합 고려하여 20%로 인하**

- **(이자경감)** 20% 초과금리 대출을 이용하던 239만명('20.3말 기준) 중 약 87%인 208만명(14.2조원)의 이자부담이 **매년 4,830억원 경감** 예상
- **(금융축소)** 나머지 약 13%인 31.6만명(2조원)은 대출만기가 도래하는 향후 3~4년에 걸쳐 민간금융 이용이 축소될 가능성
 - 이 중 약 3.9만명(2,300억원)이 **불법사금융** 이용 가능성



※ '20.6월 수준의 경제여건을 전제로 추정한 것으로, 이용자 수는 다중채무자가 제거되지 않은 수치

■ 다만, 지난 금리인하 시기('18.2월)와 달리 지금은 **코로나19 장기화** 및 그에 따른 금융권 **연체율 증가 우려** 등이 있는 상황으로,

○ 현재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**최고금리 인하** 추진

□ **(인하방식)** 향후 시장여건 급변시에도 탄력적 대응이 가능할 수 있도록 **시행령 개정***을 통해 추진

* '02년 대부업법 제정 이후 6차례의 최고금리 인하 중 시행령을 통한 인하가 4차례

□ **(시행시기)** 시행령 개정에 소요되는 시간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 등을 고려하여, **'21년 하반기**부터 시행

■ **인하에 따른 금융이용 감소 등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 병행**

① **(금융지원)** 저신용자 대상 **정책서민금융상품**(햇살론 등) 공급을 확대*하고, 취약·연체차주에 대한 채무조정·신용회복 지원 강화

*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민간금융 이용이 어려워진 차주를 구제하기 위하여 연간 2,700억원 이상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

② **(피해근절)** **불법사금융 근절조치**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피해구제 확대

- ※ ① 불법사금융 처벌 강화·불법이득 제한 등 법적 기반 강화
- ② '범부처 불법사금융 대응TF'를 통한 일제단속 및 불법광고 차단 지속·강화
- ③ 채무자대리인·소송변호사 무료지원 등 금융·법률·복지 맞춤형 연계지원 강화

③ **(민간지원)** 저신용 서민에 대한 신용공급을 강화하기 위하여 **저신용·고금리 금융업권 경쟁력 제고** 지원

※ (예) 저신용 서민 대상 신용대출 공급 모범업체에 인센티브 제공 등 검토

⇒ 대부업법·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예정

□ 17말 기준 24% 초과 금리 대출을 이용하던 차주 기준,
'20.3말 현재 만기가 도래한 약 139.9만명(13.4조원) 중

① (이자경감) 약 81.4%인 113.9만명이 24% 이하 대출로 흡수

(i) 약 74.3%인 104만명(10.4조원)은 민간금융권의 20~24% 대출로 흡수
(연간 약 3,400억원 수준의 이자부담 경감)

(ii) 약 7.1%인 9.9만명(0.6조원)은 기존 대부업 이용 저신용자 등을
대상으로 공급된 정책서민금융(햇살론¹⁷ 등)으로 흡수

② (금융이용축소) 약 18.7%인 26.1만명(2.4조원)은 금융이용 축소

- 이 중 채무조정·절약 등을 통해 대응한 분들을 제외한
4~5만명(3,000~3,500억원)이 불법사금융으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

※ (참고) 지난 최고금리 인하 이후 불법사금융 유입규모 추정

□ 불법사금융은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의 영역으로 정확한
파악은 어려우나, 각 기관의 설문·추적조사 결과는 '18.2월 이후
유입규모가 4~5만명(3,000~3,500억원) 수준으로 유사

① 금융위·금감원 추적조사('20.3월) : '17말~'18말 누적 3.8만명(2,700억원)
'17말~'19말 누적 4.7만명(3,300억원)

② 민간기관 설문 수치활용(서민금융연구원, '20.2월) : 약 4.1만명(3,420억원)

※ 대부업 대출 거절시 설문자의 최대 11.4%가 불법사금융을 이용한다고 응답
→ 24% 초과대출자 민간금융권 대출감소 추정치 36.0만명(3조원) X 11.4%

③ 금감원 불법사금융 실태조사 결과('19.12월) : 불법사금융시장 규모 추정
'17말 6.8조원 → '18말 7.1조원(약 3,000억원 증가)